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6분 20초, 그 끔찍했던 총기 사건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 6545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까이로는 2017년 10월 1일 밤, 한 평범한 시민이 라스베이거스 중심가에 있는 호텔에서 건너편 콘서트장을 향해 약 10분간 수백 발의 총알을 난사하여 58명을 사망시키고 500여 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의원들은 로비에 무너지고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총기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총기를 구입하려면 일정한 신원조회를 거치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더구나 약 30개 주에서는 총기 구입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생이 총기를 보유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인의 총기 구입이 손쉬운 데에는, 서부 개척과 독립 전쟁을 거치는 동안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미국인 특유의 역사적 경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인 배경에는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가 있다. 앞서 인용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의 글에 의하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이 최소한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만이라도 어렵게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NRA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테러리스트 목록에 오른 사람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미국에선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테러리스트 목록에 오른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도 NRA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는 NRA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미 헌법상의 ‘총기 보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 인사로 낙인찍혀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미국이나 돈 앞애 약한 정치인의 행태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총기 구매를 규제하지 못하고 총기 사고는 계속 일어났다. 심지어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교 총기 사고가 발생한 후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친구

들을 잃은 더글러스 고교의 10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을 내건 지난 3월 24일 워싱턴 DC의 집회에는 약 8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우리 생명 위한 분노의 행진

또한 미국 전역의 800여 곳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번 시위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와중에도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맞불 집회까지 열렸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와 닮은꼴이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들고나온 이유를 알 만하다.

이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할 뜻이 없어 보인다. 그는 집회가 열리기 직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골프 클럽으로 떠났다고 한다. 이것이 일정한 국정 철학 없이 평생을 재산 모으기에 급급했던 ‘사립부’ 트럼프의 민낯이다. 이 역시, 수백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성공한 사업가’ 출신의 우리나라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청춘 특·특

미세먼지 기승, 마스크 벗을 날 언제일까



황정운
조선대 정외과 2학년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 질에 영향을 주는 국외의 미세먼지는 약 30~50% 정도이며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과거엔 흙먼지 수준이었던 미세먼지가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고 독성은 훨씬 강해졌다. 폐포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는 세포의 악성 돌연변이, 즉 암 발생을 유도하고 더 작은 것은 혈관을 타고 뇌에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은 기관지염과 천식 등이 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대책은 덩어리가 큰 미세먼지에 집중돼 있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식적인 축정이 시작된 건 2015년부터인데 초미세먼지 측정소도 작년까지 미세먼지 측정소의 40%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급하게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

개의 대기 배출 사업장이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6개의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줄이고 노후 건설 기계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처도 빨라지고 있다.

시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외 영향도 줄여나가야겠지만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도로면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실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실내에서 흡연하거나 촛불을 켜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녀

석이 있다. 바로 황사인데 많은 이들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를 잘 모를 것이다. 황사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내몽골 사막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다. 이는 칼륨, 철분 등 토양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위적인 오염물질에 오염된 적이 없다면 그다지 유해성을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한다. 다만 황사가 대기오염이 된 지역을 거친 경우라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사람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등이 들어 있어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처럼 황사와 미세먼지는 발생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부터 숨을 쉬는 데 가장 중요한 깨끗한 공기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변해버린 환경과 사회를 다시금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 고



양세연
한국청렴연구원 원장·홍익대 겸임교수

문화수도에 이어 청렴수도로

가 그러나 청렴하다고 느끼고 있다. 방위 산업과 해외 자원 배리, 세월호 사건, 범 조 비리에 이어 국정 농단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패 사건이 연속 터져 나왔다.

올해는 전라도가 정도(定道) 1000년을 맞는 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구한 역사가 자랑스럽지만, 국민의 시기마다 극복에 앞장섰던 점은 더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임진·병자양란에 고경명·김천일·김덕령 등을 비롯해 수많은 지역민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으며, 구한말 의병전쟁과 동학농민혁명도 전라도민이 주도했다. 3·1운동, 광주학생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역사의 분기점마다 이 나라의 바른 역사를 견인한 것도 호남인들이다. 실로 ‘약무호남 사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란 이충무공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부패 위기 앞에서도 호남인들은 뒤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전통을 살려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도 1000년인 2018년을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청렴수도가 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송흥,

박수랑과 같은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의 고장이자, 다산의 목민심서가 탄생한 곳 이 바로 호남이므로 충분한 명분과 토대 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렴수도 광주·전남을 추동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현주소를 살펴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전남 교육청이 모두 아직 두자릿수 순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청렴도 평가는 인식 조사로서 광주·전남 공직자의 실제적 위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본이 적고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현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전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전국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청렴 지표이고 내부 직원, 외부 민원인, 정책 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광주·전남이 청렴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주목해야 할 핵심 자료임이 틀림없다.

2018년 청렴수도 원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광주·전남의 청렴도 제고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교 육청과 전남교육청은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수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그동안 낮은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과 직원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잘못된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 익명 신고, 각종 혐의회 구성 등 많은 시책을 제시하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공공기관 들도 경쟁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정도 1000년을 맞는 올해는 마침 지방 선거로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하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남의 자부심을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광주·전남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제고해 국내외 자본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청렴 리더십이 분명한 단체장들이 요청된다. 새 단체장의 청렴 의지와 공직자, 그리고 남도 시민·도민들의 열망과 협력이 결합된다면 문화수도에 이어 청렴 수도를 능히 수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社 說

결선투표 도입...민주당 광역선거 요동친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의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고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갑작스럽게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결선투표제가 들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자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결선투표는 선두주자보다 후보주자들에게 유리한 선거 규칙이다. 현재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지지율에서 박영선·우상호 의원을 상당한 폭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지사 경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을 앞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과운장현 광주 시장 등 나머지 6명의 후보가 어떻게 합종연횡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후 오늘날까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병호·양한자 후보의 거취도 주목된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 농림부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장만재 전 교육감의 3자 대결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나눠 가질 만큼 지지도에서 호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불꽃 튀는 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의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힘든 단순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와 정의’ 소통과 협치 활력 불어넣기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3당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회 지형이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의당 윤순하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어제 국회 의사과에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교섭단체 대표를 장병영·노회찬 공동 대표 체제로 하되, 국회에는 등록하는 초대 대표는 노 대표가 맡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는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8대 정책 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를 민주주의, 노동 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식량 주권과 농축수산업 육성,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검찰과 국정관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 정치 개혁과 민생 과제들이 포함됐다.

‘평화와 정의’는 현재 원내 1·2당인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현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은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범여’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범야’가 균형을 맞추게 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구도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정의’는 그동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 문화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배타적 대결 정치로 얼룩진 국회에 소통과 협치의 새 활력을 불어넣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중학생 때였다. 쉬는 시간에 친구가 ‘선생님이 찾는다’고 했다. 급히 교무실로 갔다. 그런데 선생님은 ‘부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친구 장난에 당했구나.” 그제야 그날이 만우절(萬愚節)임을 깨달았다. 만우절 거짓말은 당시엔 꽤나 재미있는 일이었다. 동료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해 볼까 연구(?)를 하는가 하면 절대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애들도 많았다.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 4월1일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서양에서는 이날을 ‘에이프릴 폴스 데이’(April Fools’ Day : 4월 바보들의 날)라고 한다.

만우절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으나 프랑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보편적이다. 옛날 신년은 현행 달력으로 3월25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날부터 4월1일까지 춘분제가 열렸고, 마지막 날에는 선물 교환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1564년 왕이 새 역법을 채택, 새해 첫날을 1월1일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지 못해 4월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해 선물 교환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또 일부는 그날 장난스럽게 신년 잔치 흥내를 내기도 했는데,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라고 한다.

하지만 동양 기원설도 있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났으나 신자들은 그 수확 기간이 지나면 보람도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 때문에 3월31일을 आयुष(आयुष)이라 부르며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등 장난을 치며 재미있어 한 데서 만우절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만우절

이처럼 만우절은 장난을 치며 사람을 속이는 날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장난이 지나쳐 공권력을 우롱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허위 신고가 바로 그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만우절에 걸려 온 112 허위 신고는 크게 줄었다고 한다. 올 만우절에도 전국 경찰청 신고된 장난 전화는 10건뿐이었다.

경찰은 만우절뿐만 아니라 형사에도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악성 신고에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적용,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이제 지나친 거짓말 장난은 범죄임을 명심해야겠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